



 Beyond the RISK  
Geopolitical Research

# 美 대통령 및 의회선거 III :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지정학 분석 2024년 6월

 리서치센터 | 2024년 6월 12일



삼성증권

# Executive Summary

리서치센터 지정학분석팀

유승민 팀장 (兼 글로벌투자전략팀장)  
strategist.you@samsung.com

박주란 연구원  
juran.park@samsung.com

- 5월 말 뉴욕주 법원에서 트럼프의 '스캔들 입막음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짐. 하지만 전국 평균 지지율과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間 첫 TV 토론을 당초 예정인 9월 16일에서 3개월 앞당긴 6월 27일에 개최하는 승부수를 던짐.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트럼프도 이를 수용. 이에 따라 美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접화.
- 트럼프는 지난 1기,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집권. 이에 반해 2기는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비 중. 예를 들어 트럼프를 지원하는 보수 싱크탱크는 현 '에너지부(DOE)'를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과학부(DESAS)'로 개편하고 부서의 정책지향점에 대한 변화를 권고. 또한 DOE 산하의 LPO(대출 프로그램 사무국) 폐지도 주장. 이는 바이든의 대표적 정책인 IR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관련하여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Agenda 47'에서 트럼프는 IRA의 폐기를 공언. 다만 연방 의회 '입법'에 의해서 IRA를 시행했던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 명령'을 통한 IRA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유력. 바이든이 임기 중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 공화당 지지 州에 상당 부분 유치. 이에 따라 의회에서 IRA 전면 폐기를 위한 입법 시, 해당 州의 반발 및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
- 트럼프는 행정 명령만으로도 IRA에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 있음. 방법은 크게 2가지. 첫째 IRA 법안의 집행을 구체화하는 바이든의 행정 명령들을 폐기하거나, 둘째,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효함으로써 IRA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것.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과거 오바마 케어 폐지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 내년 1월 취임 즉시 IRA를 무력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가능성 높음.
- 美 대선 불확실성은 하반기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동성 요인. '80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는 9~11월의 S&P500의 변동성이 선거가 없던 해보다 높았던 경향. 그런데 올해의 경우 평년보다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점화됨에 따라 금융시장도 빨리 영향을 받을 전망. 특히 바이든 vs. 트럼프 두 후보 사이 정책 차이가 큰 상황에서, 바이든의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가고 트럼프의 우위가 고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
- 주의할 점은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지, 특정 정파에 대한 선호 또는 비선호가 아님. 역사적으로 민주당(확장 재정 & 증세)과 공화당(긴축 재정 & 감세)의 정책 차이도 불구 경제와 주식시장 성과에 차이가 없었음. 다만,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더라도 양원 선거는 분점 정부의 확률이 다소 높다는 점이 선거 이후 남은 불확실성. 즉 대선 이후에도 의회가 아닌 행정 명령에 의한 통치가 정치적 갈등을 높여 금융시장의 고변동성을 지속시킬 우려.

# Contents

<b>01</b>	<b>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 III -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b>	<b>5p</b>
	1-1. 대선 레이스 조기 점화	5p
	1-2. 미국의 입법 절차와 대통령의 권한	7p
	1-3.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실현 방안 검토	14p
	1-4. 투자 시사점	20p
<b>02</b>	<b>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GPR) 추적</b>	<b>23p</b>
	2-1. GPR로 본 관찰 국가	23p
	2-2. 주요국의 GPR 추이	24p
<b>03</b>	<b>신흥국 CDS 프리미엄 추적</b>	<b>26p</b>
<b>04</b>	<b>2024년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b>	<b>29p</b>

시장은 사건의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현명하게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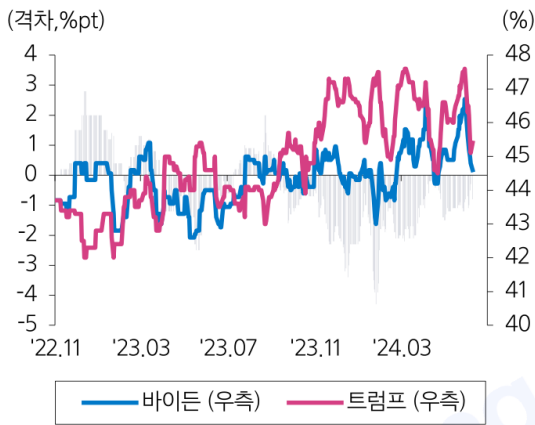
- 로버트 암스트롱 -  
(Financial Times 컬럼리스트)

## 1. '24년 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 III -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 1-1. 대선 레이스 조기 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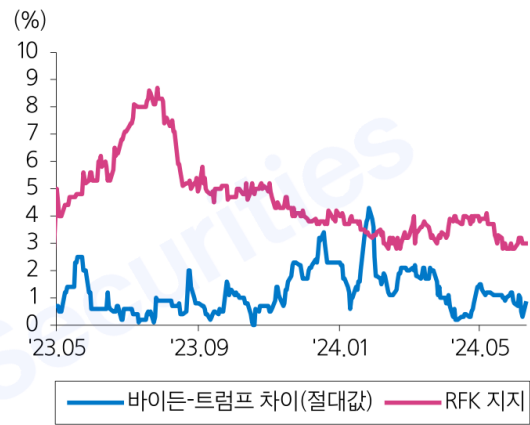
• 5월 30일 뉴욕주 법원이 '스캔들 입막음 사건'에 대해 트럼프를 유죄로 평결한 이후,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가 다소 축소되거나 일부 조사는 역전. 그러나 평균 지지율로 보면 지난 해 末 이후 지속된 트럼프의 우위에 변함없음. 특히 대선 승부에서 전국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주요 스윙 스테이트의 판세도 트럼프 리드에 큰 변화가 없음.

美 대선 후보별 지지율과 격차 (양자 경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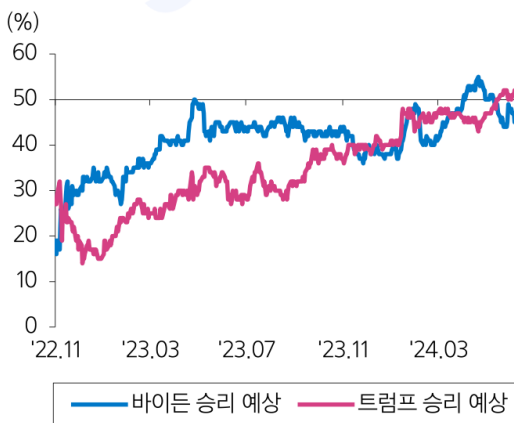
참고: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 (회색 막대 그래프는 후보 간 격차)  
 자료: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美 대선 유력 양자 후보 지지율 격차와 제3 후보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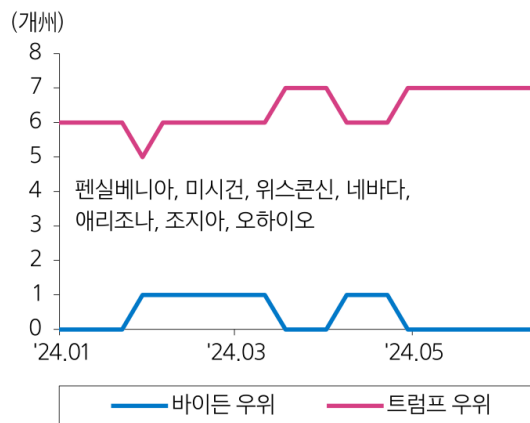
참고: 제3 후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무소속으로 출마)  
 자료: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베팅사이트의 美 대통령 선거 승자 예측



자료: PredictIt,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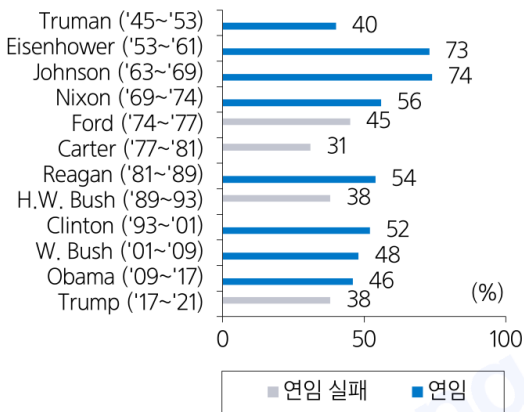
주요 7개 스윙스테이트에서 지지율 우위 여부



자료: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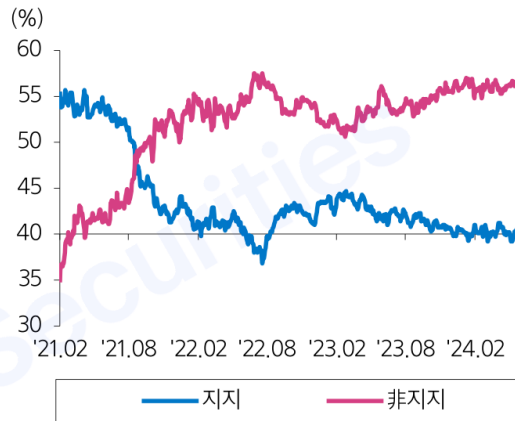
- 역대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6월 말까지 40%를 넘기지 못하면 연임에 불리.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바 이든 대통령이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띄우고 있음. 대선후보 1차 TV 토론이 당초 예정인 9월 16일에서 3개월 앞 당겨진 6월 27일 개최로 잠정 합의. 한편 이는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트럼프의 이해에도 일치.
- 트럼프의 우위가 고착될 경우, 금융시장도 과거에 비해 빨리 반응할 가능성.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연방의원 선거는 아직까지 하원에서 민주당이 우위이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서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관련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 본 보고서는 트럼프의 재집권 시 'IRA 폐기 또는 약화' 가능성을 점검.

**역대 美 대통령 6월 말 국정 운영 지지율과 연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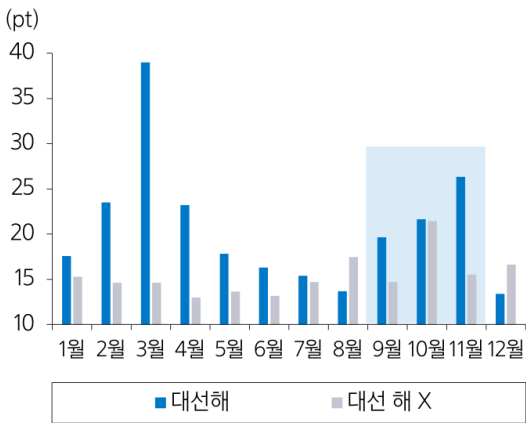
참고: 과거 지지율은 갤럽기준  
자료: 주요 언론,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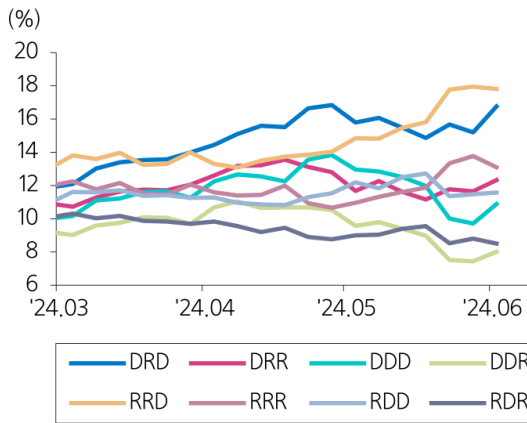
참고: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  
자료: RealClearPolitics, 삼성증권

**대선의 해 4분기 변동성 확대 (올해는 빨라질 가능성)**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트럼프 대선 승리해도 통합 정부 가능성은 아직 낮음**



자료: Predictit, Race to WH, 삼성증권 (대통령 정당-상원-하원 다수당)

## 1-2. 미국의 입법 절차와 대통령의 권한

- 트럼프는 지난 1기, 체계적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개인기에 의해서 집권. 이에 따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잦은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평가. 그러나 2기는 'Heritage 재단'과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등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의 지원하에 정책을 준비.
- 관련하여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Agenda 47'에서 IRA의 폐기를 공언<sup>1</sup>. 다만 연방 의회 '입법'을 통해서 IRA를 시행한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한 IRA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유력. 본 섹션에서는 트럼프가 선택할 정치 행위를 예상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과 대통령 행정 명령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sup>2</sup>.

### 트럼프의 'AGENDA 47' 중에서

“나는 바이든의 파괴적인 발전소 규정을 취소하고, 그의 전기차 의무를 종료하겠습니다”

“바이든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기 첫날에 이러한 그린뉴딜 만행을 끝내려고 합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친미적인 에너지 정책을 다시 내놓게 될 것입니다”

### 美 법령의 위계 구조

- 미국 법령의 위계 구조는 '연방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 조약(Treaties), 연방 법률(Federal statutes) > 연방 행정명령(Federal execu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 州헌법(State constitutions) > 州 법률(State statutes) > 州 행정명령(Stat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Municipal charters, ordinances, rules, and regulations)' 등의 순으로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법 체계 상, IRA 법률의 효력을 무산시키려면 '① IRA 법률 개정, ② 폐기 법안 발의 후 통과, ③ IRA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미할당, ④ 행정 명령을 통한 법률 집행 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축소' 등이 존재. 이 중 ①~③ 등은 의회의 권한에 해당되며 ④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실행.

### 美 의회의 입법 절차 이해

- 입법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의 역할
  - 美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 연방 헌법은 권력 분립 원리에 기초하여 입법권은 연방 의회에 속한다고 규정. 따라서 모든 법률안 발의는 양원의 의원을 통해서만 가능. 즉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법안 제출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없음.<sup>3</sup>
  - 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부는 양원의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 교서의 형태로 법률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표명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실제 상당수의 입법이 행정부에 의한 입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부는 입법 절차에 상당히 관여하는 실질적 주체로 볼 수 있음.

<sup>1</sup> 18~19 페이지 참고

<sup>2</sup>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 05. 트럼프의 재선과 법안 폐기 가능성, '24년 2월, 국회미래연구원, 동 자료를 종합 인용

<sup>3</sup> 이희훈, 「미국의 법령체계 및 입법 절차상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1권 3호, (2010.12), pg.172

- 절차적으로 최종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companion bill)’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할 필요. 중요한 점은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상,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협의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한 후 이를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재의결해야 한다는 것.

• 입법 순서

가. 법안 제출

- 법안은 상하 양원에 각각 제출.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동시에, 혹은 다른 시기에 각각 상원과 하원에 제출될 수 있음.
- 명목상 양원의 의원들은 대등한 지위를 가지나, 개별 의원의 권한은 (임기가 2년인 하원보다 6년으로 긴) 상원이 더 크다는 평가. 단, 세입, 세출 사항 등 (내치) 국정 운영 관련 법안은 하원만 제출할 수 있는 전속 사항.
-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3가지 범주로 분류.<sup>4</sup> ① 지지기반이 미약해 폐기되는 법안(bills lacking wide support, 예: 특정 선거구의 특정 이익단체 요구에 의한 법안 발의), ② 논점 없는 무의미한 법안(uncontroversial bills, 예: 국립공원 이름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 토의 없이 바로 통과됨), ③ **중요 법안(major bills)** 등.
- 이 중 ‘중요 법안’이란, ④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포함한 법안을 작성하여 의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을 의뢰한 법안(executive branch bills)과<sup>5</sup>, ⑤ 영향력이 있는 의원이 지지하는 중요정책에 대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influential member’s bills) 등.

나. 법안 회부

- 제출된 법안은 제출된 원과 제출 순서에 따라 약자와 번호를 부여(하원 제출: H.R, 상원 제출: S).
- 하원의 경우, 하원의장이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 위원회 한 개에 회부하는 단독배정,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는 다수배정으로 분류.
- 상원은 부통령이 상임의장을 수행하며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나, 각 상임위원회의 관할이 상원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하원의장에 비해 권한이 제한적.

다. 위원회 심사: 청문회, 축조심사(逐條審査, mark-up)를 거쳐 최종 의결

-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은 상임 위원장에 의해 ‘심사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한하여 소위원회로 회부.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영향력 막강.
- 청문회: 주무부처, 관련부처 행정관료와 이해관계자, 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필수적 절차사항은 아님).
- 축조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낭독하며 조문의 정합성, 내용 면밀히 검토.
- 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완료,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는 의사정족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완성된 법안과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로 송부.

<sup>4</sup> 김기균, 「미국의 법령제정과정과 입법기술 ②」, 법제처, 2009

<sup>5</sup>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IRA의 전신인 BBB(Build Back Better)법안 등은 모두 예산과 결부되어 집권당 소속 하원 예산위원장에 의해 제출



라. (하원만 해당) 규칙위원회

-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규칙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의 심사 규정, 기간을 정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행사. 규칙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실질적으로 부결된 것과 다름없게 됨 (규칙 부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
- 다수배정으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해진 법안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마. (하원만 해당) 전원위원회

- 본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하원의원 218명의 출석을 요구<sup>6</sup>. 단, 전원위원회에서는 100명만 출석하면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개정, 부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심의 편의성을 도모. 이 경우 법안 통과는 불가능.

바. 본회의 심의 후 최종 표결

- 일반 의결 정족수: 양원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sup>7</sup>.
  - ※ 하원과 구별되는 상원 본회의의 특징
- 상원은 수정안 제안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의 일정, 방법이 하원에 비해 덜 엄격. 또한 하원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중시. 때문에 입법 지연 가능성이 더 높음.
-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신속 처리되기 위해서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필요. 만장일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상정된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음.<sup>8</sup>
- 필리버스터의 종결 결의 요건은 16인 이상 의원들의 상원 의사 규칙 22조에 따른 토론 종결 동의서 서명과 본회의에서의 60표 찬성 →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배를 위해서 과반수보다 큰 60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사. 상·하원 간의 이견 조정과 대통령에 대한 법안 송부

-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승인을 득하기 위한 조건은 '양원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법안'을 통과하는 것.
- 어느 원의 결정을 다른 원이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원협의회를 통해 상, 하원 소속의원 과반수가 합의할 때까지 의견을 교환하여 양원본회의에서 의결 후 법안을 대통령에 송부.

•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sup>9</sup>

- 서명: 법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
- 거부권 행사: 법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법안을 거부할 수 있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 어느 한 원이라도 실패하면 입법 과정은 종료되고 그 법안은 폐기.
- 법안 송부 후 10 일 내 대통령의 서명/거부권 행사 존재 시: ① 의회 회기 중인 경우, 대통령의 서명이 없어도 자동으로 법률이 확정, ② 의회가 산회하여 법안을 의회로 환송할 수 없는 경우 유보거부(pocket veto)로 법안은 사장(死藏)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와 달리 유보거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재의결할 방안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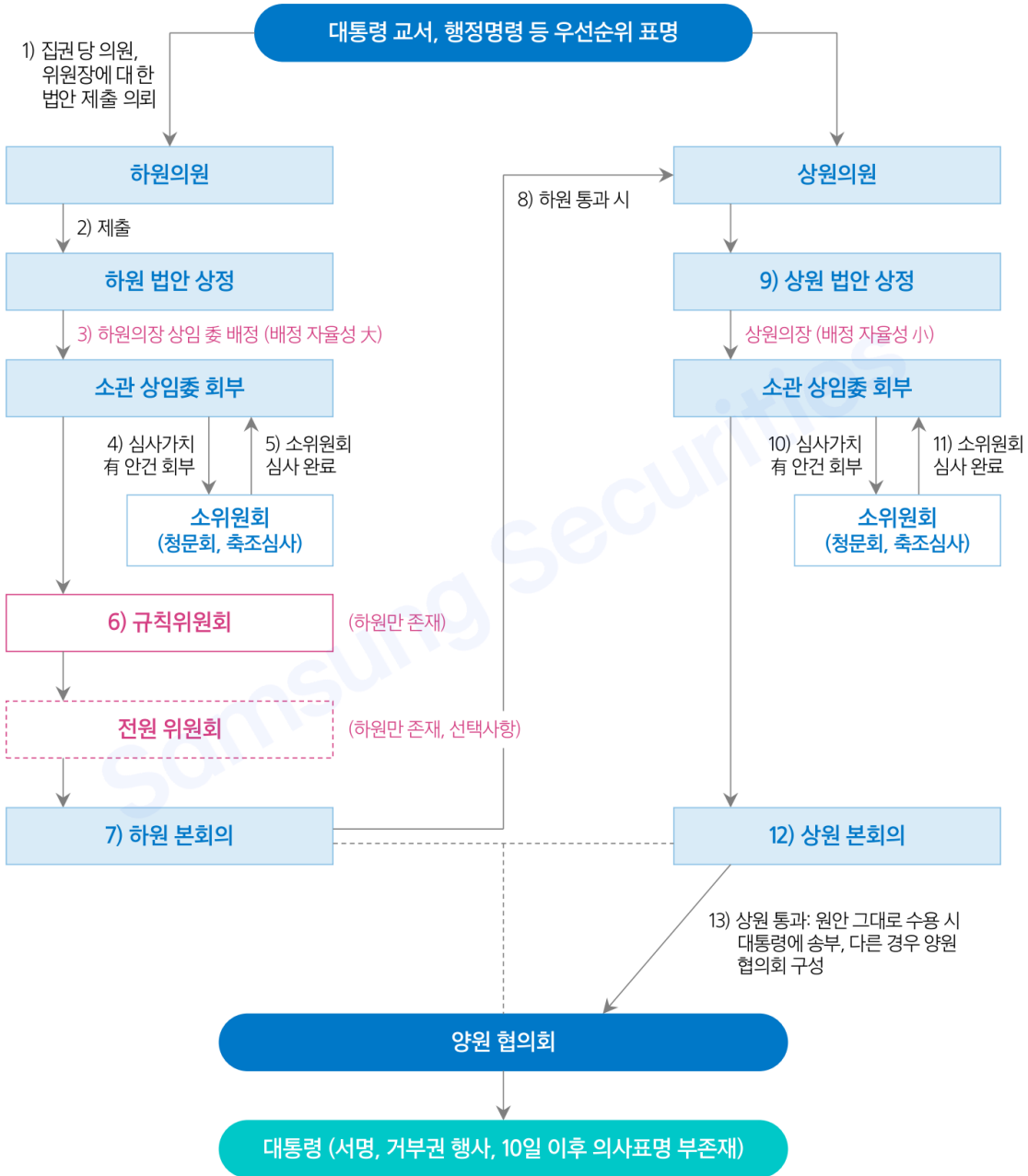
<sup>6</sup> 총 의원수는 435명, 따라서 218명은 과반수 이상

<sup>7</sup> (a) 상원: 의원정수 100명, 최소 5명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51명 출석 시 26명 이상 찬성)  
(b) 하원: 의원정수 435명, 최소 218명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218명 출석 시 110명 이상의 찬성)

<sup>8</sup>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CHIPS 및 IRA의 법제화와 미국 입법 절차」, (2022.8), pg.12

<sup>9</sup> 위의 글, pg.13

**행정부의 의뢰로 하원에 법안이 제출된 경우 입법 과정 도식화**



참고: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2」 개정판, pg. 146의 도표를 재정리  
 자료: 삼성증권

##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한 이해

-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의회 입법에 참여(participation in congressional legislation)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접 입법 관여(direct legislation)하는 방식을 통해 입법에 영향력 행사.
  - 행정부가 의회 입법에 참여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입법외견 제출'. 대통령은 의회통과 법률에 대한 서명·거부권 행사·의회 소집권 등으로 관여. '대통령은 필요하고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법안의 심의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미 헌법 조항<sup>10</sup>이 그 근거.
- 행정 명령의 성격, 특징, 의미<sup>11</sup>
  -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행정부가 실질적인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대통령(발령 주체)이 행정부 공무원(발령 대상)을 대상으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지침을 집행하기 위해(발령 목적) 연방관보(형식)에 게재하여 내리는 대내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즉, 연방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지시.
  - 단, 연방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등 제정이 간단.
  - 따라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드러내거나 의회 입법 추진을 유도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자주 이용됨(※): ① 후보 시절 공약을 공표함으로써 정책 관철 의지를 피력, ② 전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개정, 폐기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
- 법적 근거
  -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는 연방 헌법 제2조 3항 3문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발효할 수 있다'고 해석 (대통령의 행정 명령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 조항)<sup>12</sup>.
- 발표 절차(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연방관보법에 근거한 '행정 명령 제11030호'로 정리)
  - 형식을 갖추어 준비: 행정 명령은 통상 머리말, 제목, 개요, 조항 및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 서명으로 구성 (관보에 게재되는 교서의 형식을 보이기도 함<sup>13</sup>.)
  - 제출: 관리예산실(OMB) 정보규제국(OIRA)의 심사 후 법무부에서 위법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연방관보실에서 형식 준수 여부, 맞춤법 오류 등을 확인 후 대통령에게 송부.
  - 서명과 공포: 대통령 서명 후, 행정 명령을 연방관보실에 송부. 연방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행정명령이 발효(관보에 대한 게재가 효력 발생 위한 필수적 절차 요건).

<sup>10</sup> 미합중국헌법 제2조 제3항 (보고 및 의회의 소집), 국회도서관, 2010의 번역

<sup>11</sup> 현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 2020-B-4,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과 사법심사' 를 요약

<sup>12</sup> 위 글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회주의의 전통하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2조가 빈틈이 많은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고 부연. 이에, 헌법 조항의 추상성과 현실 정치에 따라 미국 대통령들은 헌법 문언에 명시되지 않는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을 행사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경험적으로 정립하였다고 평가. 단,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반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행정 명령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가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 명령에 대한 사전 심사장치가 형해화, 특정 패턴이 반복(행정 명령 발효 → 적법성, 타당성 문제 대두 → 의회 내 당파간 논쟁 → 문제된 부분만 수정한 새로운 행정 명령 발효 → 재발효된 행정 명령에 대한 다른 문제 지적 → 의회 내 당파간 논쟁)

<sup>13</sup>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연방정부의 정책, 예산 등에 대한 계획, 제안을 담은 교서(presidential memorandum), 외교정책에 관한 선언, 안보에 관한 대외사안, 사면과 같은 사인 규율행위를 위한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의 형식으로 행사되기도 함. 이 경우에도 대외적 공표절차인 관보 게재는 효력발생을 위한 필수적 요건. 가령 TPP 탈퇴를 선언했던 트럼프의 '17년 1,23일 행정 명령은 교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행정 명령 발효 가능 영역(사실상 무제한이나, 아래와 같이 분류)<sup>14</sup>

- 법률 집행 지시: 의회 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지시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을 집행.
-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관 재조직/설립/폐지(예: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유지군 창설, 부시 대통령의 테러 대응을 위한 국토안보실 창설 등).
- 국가 소유 자산 관리(예: 주로 국립공원 관련 사안).
- 군에 대한 통제(예: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중 전력 이동, 특정 임무 부여).
- 외교정책 수립. 단,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만 영향 → 州정부는 각각의 이해에 맞게 대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연방 대통령의 행위가 주정부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예: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원고가 州정부였던 이유)

• 행정 명령의 주요 역사적 선례

- ① 루즈벨트(대공황,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3,522건 발효. ② 링컨, 노예 해방령, ③ 트루먼, 한국 전쟁 당시 철강공장 국유화 행정 명령, ④ W. 부시, 9.11 테러 이후 국외송환 행정 명령, ⑤ 오바마, 오바마 케어, ⑥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 명령 등.

• 전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 (1) 의회 입법권에 의한 통제: 상위법인 (연방)법률 입법을 통해 행정 명령의 효력을 부인
  - 단, 의회의 입법권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 거부권의 존재로 인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요구되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발령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촉발<sup>15</sup>.
  - 따라서, 법률 전체를 무력화하기보다는 일부 핵심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방법 선택<sup>16</sup>
  - 일몰조항을 두어 행정 명령의 효력이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규정하기도 함.
- (2) 의회 예산권에 의한 통제: 행정 명령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가 할당하지 않음
  - 즉, 전임 대통령의 정책 집행에 관한 재정을 축소, 누락하여 예산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방법
  -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한 의회의 반대표시 방법으로, 실무에서 행정 명령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sup>17</sup>

<sup>14</sup> 현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 2020-B-4,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과 사법심사' pg.26-29를 참고

<sup>15</sup> 위 글은 '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이 유타주 일부 토지를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국립공원화하는 행정 명령 발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음. 의회는 이 당시 문제를 제기하며 5천 에이커를 넘는 국립공원 설치를 위해 연방 의회의 승인, 주정부 및 주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시도.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부결

<sup>16</sup>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정책의 의무가입조항이 자유시장경쟁원칙을 위배한다고 위헌을 주장. '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의무가입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오바마 케어의 벌금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의회 입법의 수단을 활용.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

<sup>17</sup> '13년 당시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14년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중 오바마 케어 예산을 모두 삭감

- (3) 신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한 정치적 통제: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효하여 ① 전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폐지하거나, ② 기존의 행정 명령을 개정

- 취임식 첫날,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기존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 (행정 명령은 같은 위계에 있는 행정 명령에 의한 제정, 개정 및 폐지가 모두 가능)
- 트럼프는 '17년 1.20일 취임 선서 직후 첫 행정 명령으로 전임자의 '환자보호의 경제부담 완화에 관한 행정 명령(오바마 케어) 개정령' 발동.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에 앞서,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하는 개정령 발효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행정 명령 13765호).
- 또한 같은 해 3.31일에는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행정 명령 제13653호를 무효화('기후변화영향에 대비', 대통령 교서 '발전부분 탄소오염기준', 대통령 교서 '기후변화와 국가안전보장' 등)<sup>18</sup>.
- 현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 명령 17건 중 11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있음: ① 국제기구, 협약 - 파리기후변화협정 30일 이내 복귀, WHO 탈퇴 절차 중단, ② 이민정책 - 인구조사에서 미등록 이민자 제외한 조치를 뒤집는 행정 명령, 불법체류 미성년자 추방 유예 제도(DACA) 강화, 멕시코와 국경장벽 건설 중단, 이슬람 7개국 입국 제한 폐지, 라이베리아 이민자 추방 조치 취소 등의 행정 명령 발동<sup>19</sup>.

- (4)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연방 법원(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 의한 심사

- 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법률심사), ②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행정 명령 포함)가 법익을 침해하는지 사법적으로 심사.
- 대륙법 체계를 따른 한국의 사법심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나 최근 미 연방법원은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최대한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온 경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헌법에 대통령의 법규제명령 권한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대통령 권한에 대한 규정 및 위임의 범위가 불명확.
- 때문에 ① 연방법원은 의회가 쟁점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Chevron doctrine 1단계 확인), 전문분야에 있어 행정입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은 이상 사법부는 ② 행정부의 집행행위에 대한 재량을 존중하는 심사(deference review: 2단계 확인)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사법심사의 기본적 원칙을 쉘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이라고 함.<sup>20</sup>
- 이에 따라, 연방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된 행정 명령마다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함.

<sup>18</sup> 현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 2020-B-4,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과 사법심사' pg.35-36

<sup>19</sup> 바이든, 첫날 행정 명령 17건 폭풍서명... 트럼프정책 '아웃',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9808.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9808.html), 2021.01.21

<sup>20</sup> 현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 2020-B-4,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과 사법심사' pg.79-80을 참고

### 1-3.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실현 방안 검토

-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IRA를 폐기 (또는 약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본다면 트럼프는 의회 입법에 의존하기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 명령'을 통해 IRA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이는 11월 선거 이후 만들어질 권력 구조(통합 정부 or 분점 정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IRA 폐기 공약을 실천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의미.

#### 의회를 통한 IRA 폐기 또는 무력화 방안

- IRA의 핵심 조항을 타깃으로 한 입법 (개정 시도)
  - 세액공제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혜택 조항이 핵심의제로 부상할 것. 취임 직후, IRA 법률 개정을 담은 행정 명령을 발효한 이후, 의회 내에서 법안 전체 폐기를 위한 일종의 단계나 정치적 신호탄이 될 가능성.
  - 공화당은 '22년 IRA 통과 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 또한 '23년에도 'Limit, Save, Growth Act of 2023'<sup>21</sup>를 통해 IRA 법안에 명시된 세액공제 혜택의 삭감을 시도했으나 부결됨.
- IRA 폐기 법안 발의
  - 법안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전술한 절차, 즉 법률 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이 경우 ① '24년 대통령 선거 및 양원 선거에서 형성된 권력 구조, ② 각 지역구 의원들의 IRA에 대한 이해관계, ③ IRA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정책의 존재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특히 실무에서는 ②와 ③이 중요하게 작용. '17년 추진된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 폐기 법안의 부결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통합(RRR) 정부로 국정 운영을 했음에도 기존 법안 폐기에 실패. 하원에서는 근소하게 폐기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표결 자체가 무산되거나 부결.<sup>22</sup>
  -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정책으로서 트럼프 케어가 유의미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공화당 지역구 내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유권자 등)가 존재했기 때문.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IRA 폐기 법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야 하며, 이 조건에 더해 IRA의 혜택에 비견되는 ① 대안정책이 존재해야 하고, ② 이 정책이 기존 IRA의 혜택을 받던 이해관계자의 발언을 무력화할 만큼 지지를 얻을 필요. 하지만, IRA 관련 투자는 공화당 강세 지역구에서 더 대규모로 유치되어 법안 폐기 시도 시 이탈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15~16페이지 참고)<sup>23</sup>.
- 법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IRA 법안의 효과를 축소
  - 의회에서 IRA 보조금, 세제 혜택을 제외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IRA 통과 시와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예산 조정권을 통한 법안 통과 시도 가능(공화당이 상원에서 60석 이상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수월)

<sup>21</sup> '23년 초 부채 한도 대립 국면에서 발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 그린뉴딜 세금 공제를 폐지하고, 전통 천연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

<sup>22</sup> 박성준,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86호, (2024. 2), pg.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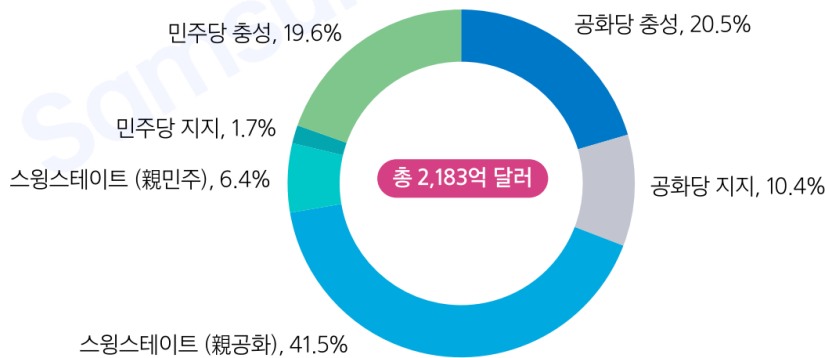
<sup>23</sup> 위 글 pg. 14는, '23년 Limit, Save, Growth Act of 2023 법안 발의 당시 공화당 중서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존재했음을 지적. 중서부 핵심 산업인 바이오 연료 지원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서부 지역 의원들이 바이오 연료 관련 세액공제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IRA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의 혜택이 제공될 필요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의 정책을 비난, 폐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

**따라서 현실적으로 의회를 통한 IRA 무력화 가능성은 낮음.**

- 11월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 선거도 동시에 치뤄져 중요. 상원의 약 1/3 그리고 하원의 전체를 선출하는 등 미국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
  - 통합 정부(Unified government)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원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로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강력해짐. 이와 달리 분점 정부 (Divided government)는 법안 통과, 조약 비준, 내각 및 법원 인사 등에서 의회의 협조가 중요. 1970년대 이후 분점 정부가 빈번해지며 정치적 합의의 난관으로 일몰조항을 통한 법률 통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견제, 정치세력 간 타협의 순기능 vs. 정책 추진에서 과도한 정치화 비판)
- 만약 공화당이 대통령과 양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압도적이지 못하다면) 의회의 입법권한을 통해서 IRA의 폐기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관련 주의 반발 및 표결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
  -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약 2,180억 달러 규모의 청정산업 투자를 유치. 여기에는 IRA, 과학법 등 통과 이후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 특히 親공화당 성향의 Swing State에 최대인 905억 달러의 투자가 확정돼 전체의 80% 이상을 점함. 이는 대선을 겨냥한 전략.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유치한 주요 투자 (vs. 역대 대선 지지 성향에 따른 州 분류)**



참고: '23년말 기준, 주별 정치 성향은 당사의 1월 5일 보고서(2024년 지정학의 최대 변수: 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 20pg 참고  
 자료: SIA Analysis, 주요 언론, Wisevoter, 삼성증권

###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유치한 주요 투자 상세

대선 지지 성향*/주 이름 (대통령 선거인단 수)	투자 유치 기업(십억 달러)
<b>공화당 총성(99명)</b>	<b>소계(44.70)</b>
사우스캐롤라이나	Redwood Materials(3.50), Volkswagen(2.00), Albemarle Corporation(1.30), First Solar(1.10), BMW(1.00), Envision AESC(0.81), BMW(0.70), Pallidus(0.44), Cirba Solutions(0.30), Kontrolmatik Technologies(0.28), Bosch(0.26), Bosch(0.20)
아이다호	Micron(15)
엘라베마	Ultra Safe Nuclear Corporation(0.23), Hyundai Mobis(0.20), Samkee(0.13), Nucor(0.13)
오클라호마	Enel(1.00)
유타	Texas Instruments(11.00)
캔자스	EMP Shield(1.90), Integra Technologies(1.80), Tesla(0.77), Canadian Solar(0.25), Cabot(0.20), X-Fab(0.20)
<b>공화당 지지(83명)</b>	<b>소계(22.61)</b>
노스캐롤라이나	Wolfspeed(5.00), Toyota(2.10)
루이지애나	First Solar(1.10), Element 25(0.48)
미주리	ICL Group(0.40)
웨스트버지니아	Form Energy(0.76)
인디애나	GM and Samsung SDI(3.00), ENTEK(1.50), GM(0.49), Polar Semiconductor(0.42), Nhnanced Semiconductors(0.24), Nucor(0.12), Jaewon Industrial(0.10)
켄터키	Toyota(0.59), Hitachi(0.15), Thai Summit(0.13), Toyo Ink(0.10), LG Chem(3.20), Magna International(0.79), Piedmont Lithium(0.58), Ultium Cells(0.28), EnerVenue(0.26), 6K(0.25), Nissan(0.25), Hanon Systems(0.17), Enchem(0.15)
<b>親공화 스윙스테이트(80명)</b>	<b>소계(90.50)</b>
아리조나	INTL(30.00), TSMC(28.00), LG Energy Solution(5.50), American Battery Factory(1.20), Sion Power(0.34), Evelution Energy(0.20), KPCT Advanced Chemicals(0.20)
오하이오	Honda and LG Energy Solution(4.40), GM(0.76), Honda(0.70), Illuminate USA(0.60), Fuyao Glass(0.30), Cirba Solutions(0.20), First Solar(0.18), EdgeEnergy(0.15), JSW Steel(0.12)
조지아	Hyundai and SK On(5.00), Hyundai and LG Energy Solution(4.30), Freyr(2.60), Qcells(2.50), Hyundai Mobis(0.93), Anovion(0.80), Sewon America(0.30), Aurubis(0.28), Kia(0.20), Ecoplastic Corporation(0.20), Hanwha Advanced Materials Georgia(0.15)
플로리다	CMG Cleantech(0.43)
<b>친민주 스윙스테이트(63명)</b>	<b>소계(14.02)</b>
<b>민주당 지지(133명)</b>	<b>소계(3.69)</b>
<b>민주당 총성(80명)</b>	<b>소계(42.76)</b>
<b>전체(538명)</b>	<b>총계(218.32)</b>

참고: \* 주별 정치 성향은 당사의 1월 5일 보고서(2024년 지정학의 최대 변수: 美 대통령 및 의회 선거) 20pg 참고  
 자료: SIA Analysis, 주요 언론, Wisevoter, 삼성증권



### 대통령 행정 명령에 의한 IRA 무력화가 유력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법 체계 상, IRA 법률의 효력을 무산시키려면 ‘① IRA 법률 개정, ② 폐기 법안 발의 후 통과, ③ IRA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미할당, ④ 행정 명령을 통한 법률 집행 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축소’ 등이 옵션. 이 중 ①~③ 등은 의회의 권한에 해당되며 ④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
- 주별 이해가 다르고 의회의 압도적 지배가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정 명령’을 통해서 IRA의 무력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언론들은 이 가능성을 유력하게 예측<sup>24</sup>.
- 한편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를 지원하는 보수적 싱크탱크는 연방 행정부 조직의 개편을 권고. 이 중 ‘Heritage 재단’은 ‘23년에 ‘Project 2025: 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sup>25</sup>’이라는 약 890여쪽에 달하는 정책 구상집을 발간. 여기서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기존 ‘에너지부(DOE)<sup>26</sup>’를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과학부(DESAS)<sup>27</sup>’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처 역할에도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권고.
- 그리고 에너지부에 의해서 집행돼 온 특별이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와 개편을 요구.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구인 LPO<sup>28</sup>를 폐지하고, 이를 통한 신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IRA를 정조준해 무력화하려는 정책 권고. 하지만 **행정부 개편 역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따라서 트럼프는 행정 명령을 통한 수단에 우선 중점을 둘 전망이다.**

### 행정 명령에 의한 구체적 방식

- IRA 법안의 집행을 구체화하는 행정 명령을 폐기
  -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상위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에 대한 행정 명령을 제정. 전임자의 행정 명령을 폐지함으로써 IRA 법률의 실질적인 집행 효과를 축소.<sup>29</sup>
-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정 명령을 발효함으로써 IRA 법률 일부 내용을 무력화할 수도 있음
  -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기차 산업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존재. (예: 연료 효율 기준을 완화 → 전기차 전환 속도 지연 → 배터리 수요 감소)<sup>30</sup>
- 취임 직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선례 감안 시, **‘25년 1월 20일 취임 선언 후 정치적인 퍼포먼스로서 IRA 폐지와 관련한 행정 명령 발효될 가능성 높음.**

<sup>24</sup> Donald Trump would gut Joe Biden’s land mark IRA climate law if elected, FT, ‘23.11.23

<sup>25</sup>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Project 2025 :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The Heritage Foundation

<sup>26</sup> Department of Energy

<sup>27</sup> Department of Energy Security and Advanced Science

<sup>28</sup> LOAN PROGRAM OFFICE

<sup>29</sup> 22페이지 이하

<sup>30</sup> 박성준,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86호, (2024. 2), pg.15

## America Must Have the #1 Lowest Cost Energy and Electricity on Earth (Agenda 47 中)<sup>31</sup>

(전략)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에너지는 약하고, 기준 이하이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풍차들은 녹슬고, 썩습니다. 그것들은 새들을 죽입니다. 그것은 가장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Green New Deal이라고 불리지만, 나는 그것을 Green New Hoax<sup>32</sup>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미국으로 밀려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중략)

바이든은 기존의 발전소들을 폐쇄함과 동시에 수억 명의 미국인들을 초고가 전기차로 내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차보다 비용이 두배나 듭니다. 게다가 우리 차들은 더 좋고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료를) 채우기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액체 금이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우리 발 바로 아래에 있는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같은 금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핵, 청정 석탄, 엄청난 양의 수력과 그 밖의 모든 알맞은 가격의 에너지를 수용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중략)

나는 바이든의 파괴적인 발전소 법들을 취소하고, 그의 전기차 의무를 종료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사고 싶다면, 그건 괜찮지만, 다른 모든 형태의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국내 에너지 생산을 시작합니다. 3년 전 에너지 독립을 생각해 보세요. 단기간 내에 에너지 우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झा으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세금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들을 끝장 냈습니다. 첫 날 그들은 그것을 끝냈습니다.

나는 전력망을 완전히 현대화하여 향후 100년을 대비하고,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시행하고, 실제 작동하는 수백 개의 새로운 아름다운 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부의 엄청난 성장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sup>31</sup> donaldtrump.com, 이하 인용 동일

<sup>32</sup> 거짓말

### Rescuing America Auto Industry from Joe Biden's Disastrous Job-Killing Policies (Agenda 47 中)

조 바이든은 수천 대의 전기차들이 모두 팔리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데도, 미국인에게 값비싼 전기차를 강제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치명적 명령들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린뉴딜 운동은 미국 자동차 생산의 파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동차 가격의 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좌파 정책들은 가족들과 소비자들에게 재앙이며, 현재 새 차의 평균 가격이 5만 달러가 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러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를 보조하는 데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사용할 여유가 없고, 심지어 사용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소비자들을 죽이고 미국 제조업도 죽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전면적인 CAFE 기준<sup>33</sup> 도입으로 미국산 픽업트럭, SUV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에 2,000억 달러의 비용이 2배가 되도록 공격했습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 11만 7,000개를 없앨 것이며 미시간, 인디애나 및 오하이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중략)

바이든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기 첫날에 이러한 그린뉴딜 만행을 끝내려고 합니다.

(중략)

미국 자동차 산업을 이제 다시 살립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의 모든 유권자는 자동차 산업을 하려면 부패한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물리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President Trump on Making America Energy Independent Again (Agenda 47 中)

(전략)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친미적인 에너지 정책을 다시 내놓게 될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모든 가치 있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하게 승인을 내릴 것이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최대 속도에 증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즉시 발전소, 송유관, 송전망, 항만, 정유시설, 해운 터미널 건설에 투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제안들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2년반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매우 저렴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sup>33</sup> 기업 평균 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 1-4. 투자 시사점

- 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경제(통상, 환경, 산업)와 정치·외교(대중국, 안보)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음.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관심사인 IRA 관련 정책은 트럼프가 ‘폐기’를 공언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향후 의회구도 등 일부 변수가 있지만, **당선 시 트럼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 명령’을 통해서 바이든의 IRA 정책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임.**
- 보다 큰 시각에서 본다면 **11월 美 대선 결과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트럼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전세계 최저가 에너지 공급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재생 대신 석유, 천연가스, 핵, 석탄, 수력발전소 등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 물론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돼 이 역시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으나, 적어도 **트럼프 임기 내내 친환경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sup>34</sup>

####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정책 비교

구분	바이든 공약 (민주당)	트럼프 공약 (공화당)	
대중국 전략 (무역/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risking</li> <li>• 현행 대중 관세 유지(평균 관세율 19.5%)</li> <li>•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li> <li>• 수출통제 강화(첨단분야 한정, 동맹 동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rategic decoupling</li> <li>• 보편적 상호관세 적용(트럼프 임기 내 60%로)</li> <li>•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대우(MFN) 철폐</li> <li>• 수출 통제범위 확대(금융 투자, 지적재산, 인력 등)</li> </ul>	
공급망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 니어·프렌드쇼어링</li> <li>• 동맹·파트너 역할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 위주</li> <li>• 자국 중심 공급망</li> </ul>	
통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Multi-lateral)</li> <li>• 동맹·파트너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간(Bi-lateral)</li> <li>• 보호무역주의</li> </ul>	
환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그린전환</li> <li>• 기후변화 적극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 산업 육성</li> <li>• 기후변화 회의론</li> </ul>	
산업 정책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확대</li> <li>• 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보조금 유지</li> <li>• <b>IRA 생산 인센티브 축소</b></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전기차 보조금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b></li> </ul>
외교,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주의(Internationalism)</li> <li>• 중국 및 러시아 견제</li> <li>• 러·우 전쟁 지속 (장기적 유리 판단)</li> <li>• 우크라이나 NATO 편입</li> <li>• 동맹 연계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주의(Isolationism)</li> <li>• 중국 견제 우선</li> <li>• 러·우 전쟁 조기 종결</li> <li>• 우크라이나 NATO 편입에 소극적</li> <li>• 동맹에 비용·역할 압박</li> </ul>	
美 국내 경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출 확대</li> <li>• 고소득층, 기업 세율 인상</li> <li>• (공동)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내수 경기 부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출 감소</li> <li>• 전반적 감세, 규제 완화</li> <li>• (공동)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내수 경기 부양</li> </ul>	

자료: 산업연구원(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24.5), 삼성증권 재정리

<sup>34</sup> 트럼프의 임기가 '25년 초~'29년초까지 단임으로 제한되고, '26년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모두 잃더라도 행정 명령이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이는 하반기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동성 요인이 될 것. 1980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의 경우 9~11월 사이 S&P500의 변동성은 선거가 없던 해보다 높아진 경향을 보여 왔음. 그런데 올해의 경우 TV토론이 평년보다 3개월 앞당겨지는 등 美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점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민감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 특히 바이든 vs. 트럼프 두 후보 사이 정책 차이가 큰 상황에서 여름에도 트럼프의 우위가 고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
- 다만 주의할 점은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지, 특정 정파에 대한 선호 또는 비선호가 아님. 역사적으로 민주당(확장 재정 & 증세)과 공화당(긴축 재정 & 감세)의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에 차이가 없었음. 다만,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더라도 양원 선거는 분점 정부의 확률이 다소 높다는 점이 선거 이후 남은 불확실성. 즉 대선 이후에도 의회가 아닌 행정 명령에 의한 통치는 정치적 갈등을 높여 금융시장의 고변동성 지속을 자극할 우려.

#### 美 권력 구조에 따른 경제 및 주식시장 (1945년 이후)

권력 구조*	실질GDP 성장률(%)	S&P500 지수		해당 연수	비고
		연간등락 (%)	변동성 (%)**		
RRR	2.83	12.95	0.71	8	
DDD	3.12	9.29	0.79	24	
DDR	2.04	15.72	0.90	5	금융위기 후 4년 포함 ('11~'14년)
RDD	2.78	4.91	0.96	22	
DRR	3.18	12.96	0.99	10	
RRD	2.56	13.72	1.04	8	
RDR	1.35	-18.2	1.51	2	Tech 버블 붕괴 후 2년 ('01, '02년)
DRD	-	-	-	-	사례 없음
통합 정부***	3.04	10.20	0.77	32	
분점 정부****	2.69	8.29	1.00	47	

참고: \* 대통령-상원다수당-하원다수당 \*\* 일간 등락률의 연간 표준편차; \*\*\* 대통령 소속 정당이 양원의 다수당

\*\*\*\*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상하 양원 모두 또는 둘 중 하나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자료: FT, 삼성증권 재정리

(참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관련 주요 인센티브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관련 행정 명령

IRA 관련 주요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대상
ITC (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기술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li> <li>투자만으로도 수령 가능한 세제 혜택</li> </ul>	
AMPC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li> <li>첨단기술 제품(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의 정액, 핵심광물 생산비의 정률 세액공제</li> </ul>	기업
PTC (재생에너지생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li> <li>발전량에 따라 제공되는 세제 혜택</li> </ul>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 탑재 배터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3개국에서 이루어져야 함</li> <li>벤, SUV, 픽업트럭은 8만 달러, 세단 등 이외 승용 차량은 5.5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모델</li> <li>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은 40% 이상('27년까지 80%로 상향) 북미에서 추출</li> <li>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50% 이상('29년까지 100%로 상향) 북미에서 제조</li> </ul>	美 소비자

자료: 주요 언론, 삼성증권 재정리

바이든의 그린뉴딜, IRA 관련 주요 행정 명령

번호	명칭과 주요 내용	서명일
14008	<p><b>국내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대처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 협정 재가입, 유엔 기후 변화 당사자국 총회(COP26) 등 국제 기후 변화 단체에 참여 및 기여</li> <li>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철폐되었던 오바마 정부의 Climate Change and national Security 교서를 복원</li> <li>백악관 내 기후 정책실 신설(White House 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li> <li>각 행정기관의 장은 2022년 회계연도 이후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치를 철폐</li> </ul>	'21.1.27
14037	<p><b>친환경 자동차 및 트럭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무공해차량(BEV, PHEV, fuel cell EV)으로 공급, EPA에 대해 승용차와 트럭에 적용될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 (대선을 앞두고 '24년 4.18일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존 기준은 유지)</li> </ul>	'21.8.5
14052	<p><b>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의 시행 (Implement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이 규정하는 Made in America를 시행, 미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li> <li>대통령 행정부 내 인프라 구현 태스크포스(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Task Force)의 설치.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국가경제협의회 이사가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 직위를 수행</li> </ul>	'21.11.15
14057	<p><b>미 연방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청정 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촉진 (Catalyzing Clean Energy Industries and Jobs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방정부는 사용하는 전력을 24/7 CFE(Carbon Free Energy) 조건을 충족하는 전력으로 100% 전환해야 함</li> <li>2035년까지 탄소무공해 차량 100%,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8년의 65%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을 규정</li> <li>효력의 예) 행정 명령의 적용을 받는 미군은 모든 군용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교체할 의무가 발생</li> </ul>	'21.12.8
14082	<p><b>2022년 IRA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수준보다 50~52% 줄이고, 2035년까지 전력 생산 부문의 탄소 제로를 달성</li> <li>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 (이는 행정 명령 14057 Sec. 102. 에 규정된 범 정부 차원의 목표)</li> </ul>	'22.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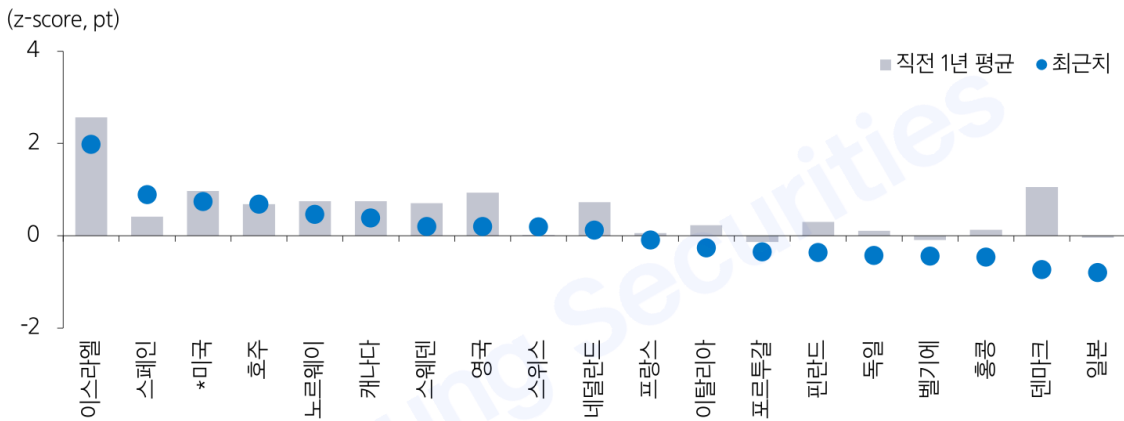
자료: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삼성증권 재정리

## 2. 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GPR) 추적

### 2-1. GPR로 본 관찰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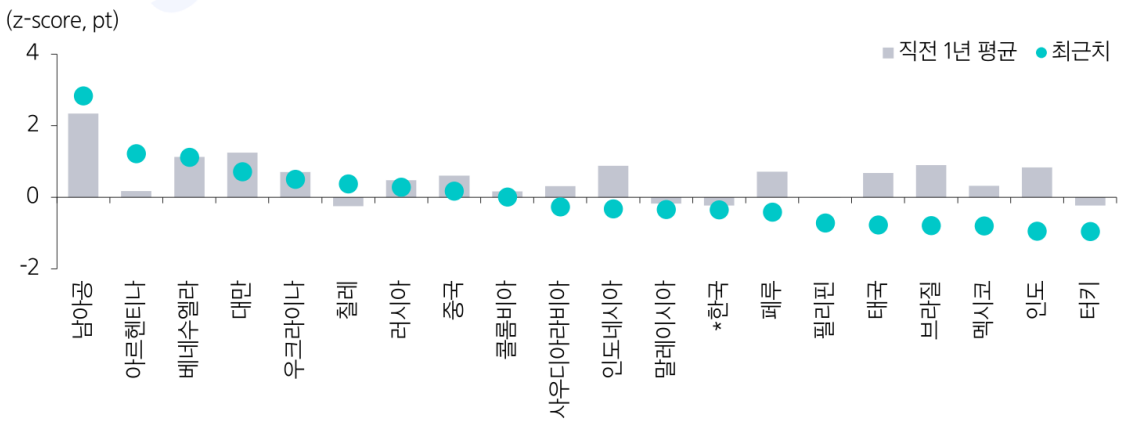
- 선진국에서는 주요 지역 대비 이스라엘의 GPR이 높게 유지. 향후 가자지구의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국들 사이 시각 차이가 있고, 이스라엘 내부 정정불안이 지속 중. 스페인은 총리가 아내의 부패혐의로 곤경에 처해있고, 미국의 경우 선거가 임박하면서 GPR이 상승 중. 한편 신흥국에서는 30년째 장기 집권 중인 ANC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진 남아공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GPR이 최근 수개월간 크게 상승.

선진국 GPR의 직전 1년 평균과 최근 수치 비교 (평균 대비 변화율 기준)



자료: Matteiacoviello.com,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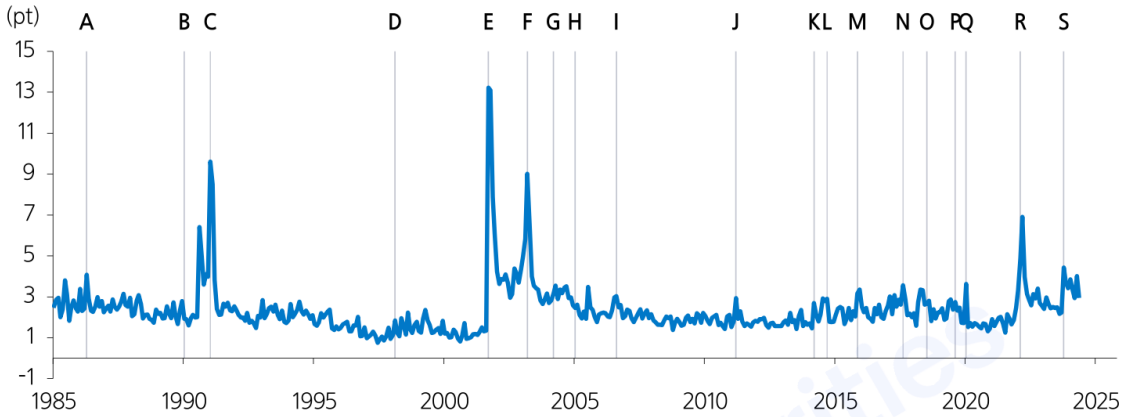
신흥국 GPR의 직전 1년 평균과 최근 수치 비교 (평균 대비 변화율 기준)



자료: Matteiacoviello.com, 삼성증권

## 2-2. 주요국의 GP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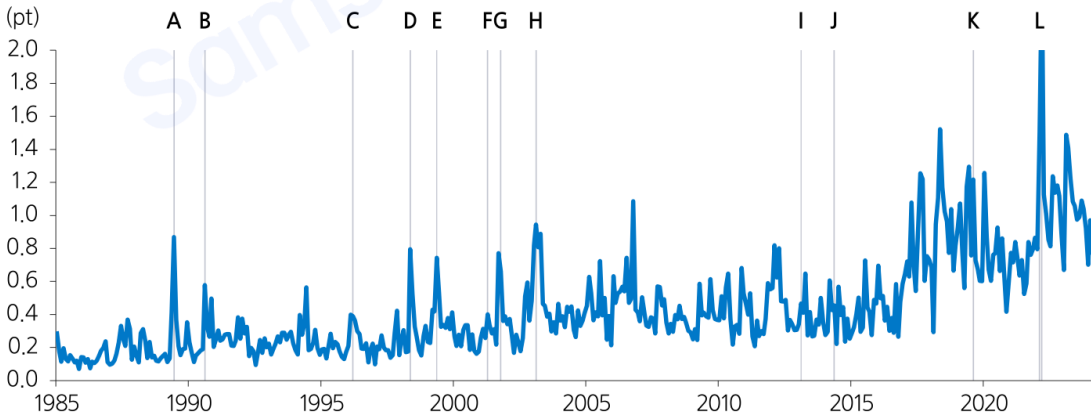
### 미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 주요 이벤트



참고: A 美 시리아 폭격 (1986.4), B 쿠웨이트의 사우디 침공 (1), C 걸프전 (1991.1), D 빈라덴 위협 (1998.2), E 9/11 테러 (2001.9), F 美 이라크 침공 (2003.3), G 마드리드 폭탄 테러 (2004.3), H 폭탄 테러 (2005.1), I 대서양횡단항공기 테러 미수 (2006.8), J 아랍의 봄 (2011.3), K 러 크림 침략 (2014.3), L ISIS 위기 (2014.9), M 파리 테러 (2015.11), N 북핵 위협 (2017.8) O 美 이란 긴장 (2018.7), P 美 중 갈등 (2019.8), Q 中 코로나 확산 (2020.1), R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2022.2), S 이-팔 사태(2023.10)

자료: Matteiacoviello.com, REFINITIV, 삼성증권

### 중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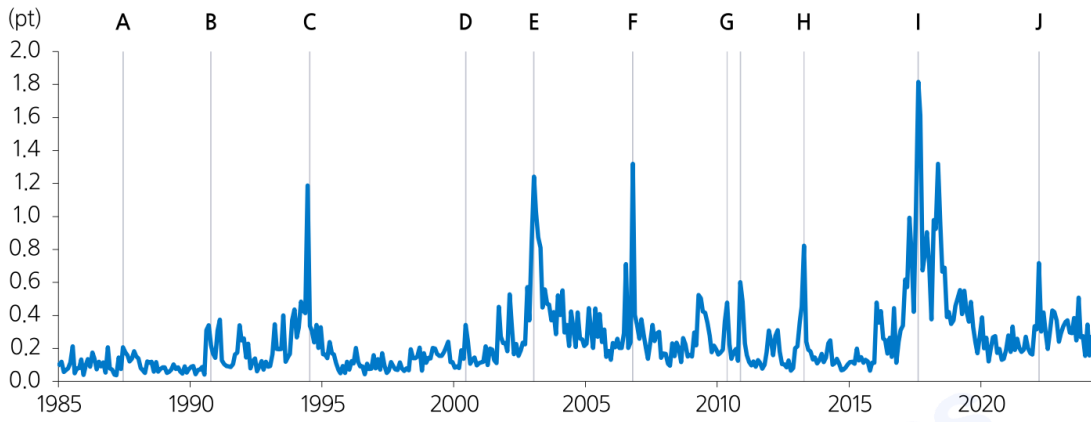


참고: A 천안문사태(1989.6), B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8), C 3차 대만해협 위기(1996.3), D 인도네시아 인종 폭동(1998.5), E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피폭(1999.5), F 하이난섬사건(2001.4), G 미국 아프카니스탄침공(2001.10), H 미국 이라크 침공(2003.2), I 북한 3차핵실험(2013.2), J 우루무치역 테러(2014.5), K 미중 무역 갈등(2019.8), L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확산(2022.2~3)

자료: Matteiacoviello.com, REFINITIV,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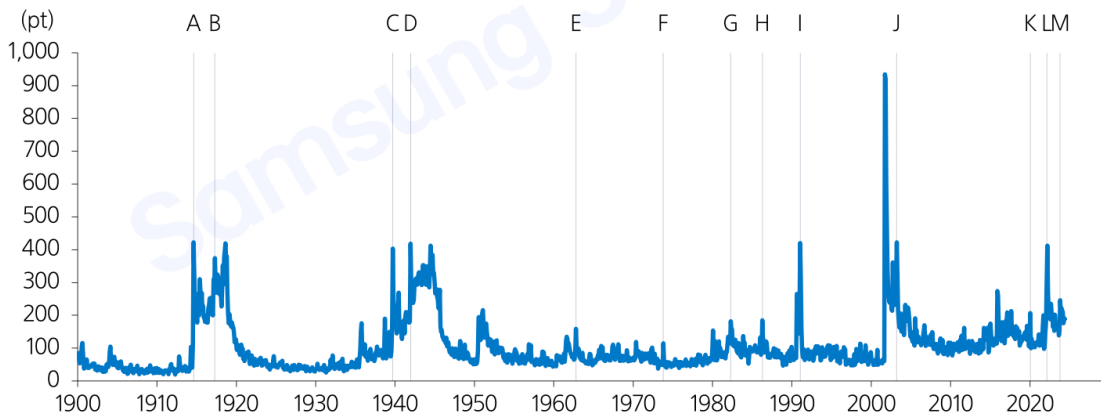


**한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6월 민주항쟁, B 한-소련 수교, C 김일성 사망, D 1차 남북정상회담, E 노무현 대통령 당선, F 북한 2차 핵실험, G 유럽재정위기, H 개성공단 중단, I 북-미 긴장, J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ICBM 발사  
 자료: Matteoiacoviello.com, REFINITIV, 삼성증권

**전 세계 장기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1차 세계대전 발발(1914.8), B 미국 참전(1917.4), C 2차 세계대전(1939.9), D 일본의 진주만 공격(1941.12), E 소련 핵실험 재개(1962.10), F 1차 오일쇼크(1973.10), G 폴란드 전쟁(1982.4), H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4), I 걸프전(1991.1), J 美 이라크침공(2003.3), K 中 코로나 확산(2020.1), L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2022.2), M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2023.10)  
 자료: Matteoiacoviello.com, REFINITIV, 삼성증권

### 3. 신흥국 CDS 프리미엄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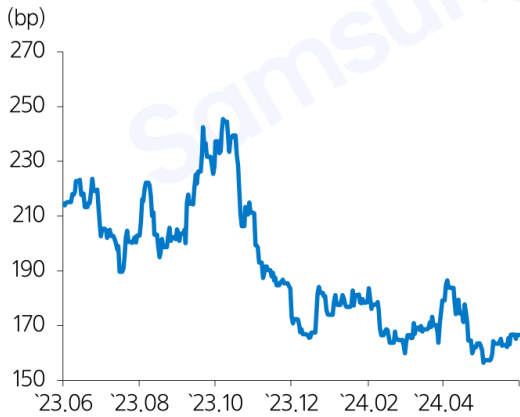
#### 신흥국 CDS 프리미엄 대시보드

국가	CDS (bp)	MTD (bp)	1개월 (bp)	3개월 (bp)	6개월 (bp)	YTD (bp)	1년 (bp)
EM	166.64	+3.8	+3.1	+1.8	△17.8	△0.8	△53.1
한국	35.35	△0.1	+0.7	+2.0	+7.5	+8.0	△1.4
중국	64.23	+1.8	+0.1	△1.5	+1.8	+3.6	+2.5
인도네시아	72.07	△0.2	+0.1	+2.5	△3.0	+0.1	△12.2
필리핀	66.88	△0.0	+2.1	+6.1	+0.3	+2.9	△12.7
말레이시아	46.23	△0.2	+0.1	+6.6	+3.2	+4.3	△12.7
태국	42.70	△0.0	△0.9	+0.5	△0.5	+1.5	△12.1
브라질	150.01	+7.1	+9.6	+21.9	+3.9	+17.5	△45.6
멕시코	109.55	+15.5	+15.6	+25.3	+13.4	+21.1	+2.3
러시아	1,500.08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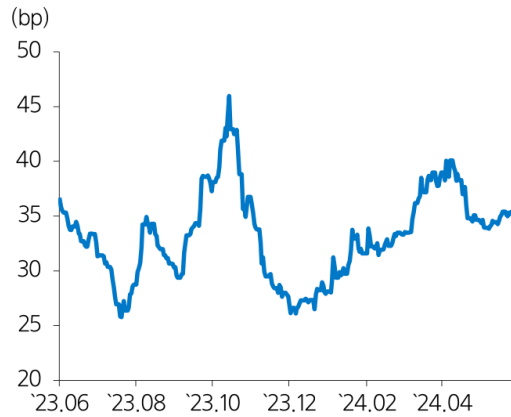
참고: '24년 6월 11일 기준,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22년 3월 18일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음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주요 신흥국 CDS Prem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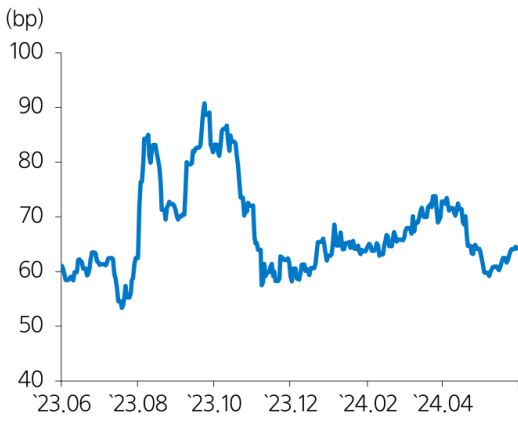
EM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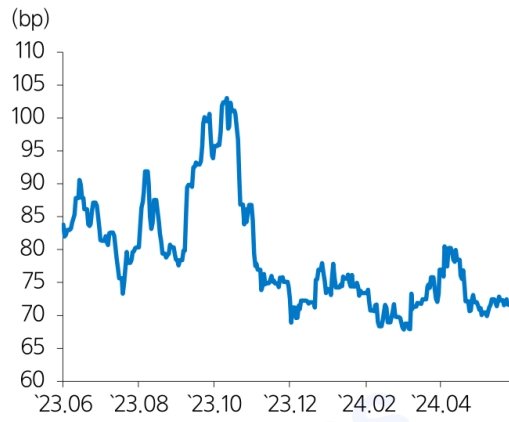
한국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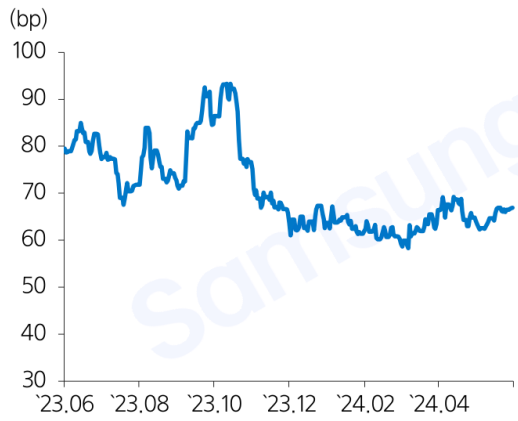
**중국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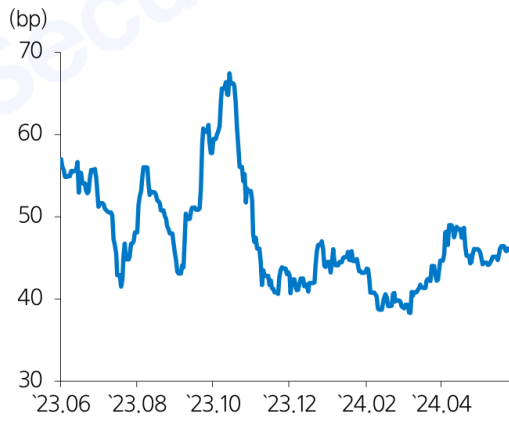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5y CDS**



**필리핀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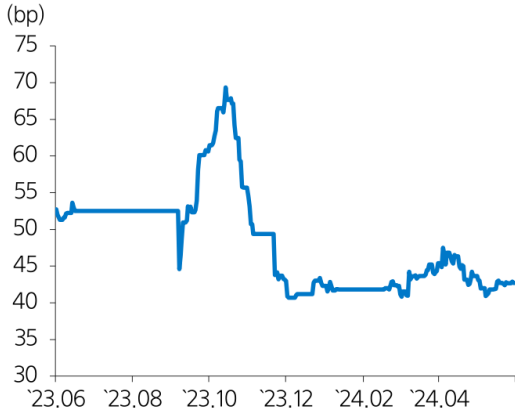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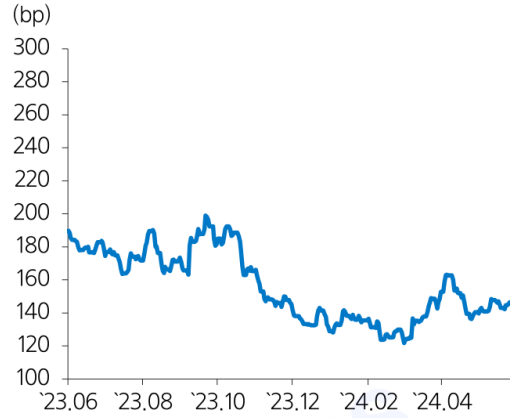


참고: '24년 6월 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태국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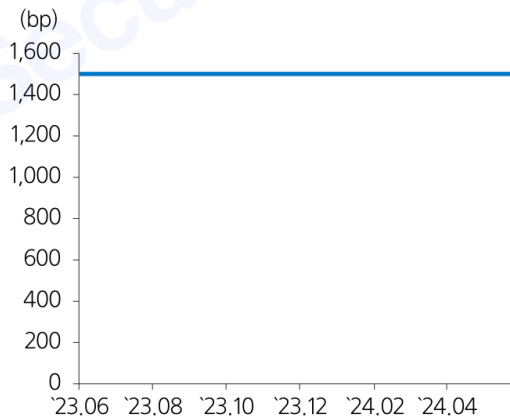
**브라질 5y CDS**



**멕시코 5y CDS**



**러시아 5y CDS**



참고: '24년 6월 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참고: 러-우 전쟁 발발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음

#### 4.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일자	지역/국가	이벤트	Review & Preview
5월 2일	영국	지방 선거	집권당인 보수당 대패, 노동당 승리
5월 19일	중동 지역	이란 라이시 대통령 유고	5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이란의 기존 강경 기조 지속 예상
5월 20일	대만	대통령 취임식	16대 총통 라이칭더 취임, 중국은 취임 나흘 만에 대만 포위 훈련
5월 23~25일	G7	G7 재무장관 회의	제닛 옐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
5월 29일	남아공	의회 선거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처음으로 총선에서 과반 확보 실패
5월 30일	미국	트럼프,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 판결	스캔들 입막음 비용 관련 34개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
6월 1일	중동 지역	OPEC+ 장관급 회의	현재 원유 감산량, '25년 말까지 1년 더 유지하기로 합의
6월 2일	중남미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첫 여성 대통령 당선
6월 6일	유로 지역	ECB 정례회의	정책금리 25bp 인하 (ECB 예금 금리, 4.0%→3.75%)
6월 6일~9일	유로 지역	유럽 의회 선거	중도파(EPP, S&D, RE) 과반 확보했으나, 극우 진영이 다소 약진
6월 11일~12일	미국	연준 FOMC	한국시간 6월 13일 새벽. 연준 경제전망, 점도표 제시
6월 13일~15일	G7	G7 정상회의	이탈리아 폴리아 개최. 우크라이나 전쟁, 이민 이슈 논의
6월 14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6월 15일~16일	스위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파견 예정. 우크라이나 평화안의 실현을 목표
6월 27일	미국	美 대선 후보 CNN TV 토론회	CNN 주최, 대선 레이스 조기 접화
6월 28일	중동 지역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5/19 라이시 大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 갈리버프 국회의장 등 출마
6월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시행	마크롱, 유럽 선거서 집권여당 참패하자 6/9 의회 해산. 조기 총선 승부수
7월 4일	영국	조기 총선 시행	하원 의석 650석, 차기총리직 두고 조기 총선
7월 9일~11일	NATO	NATO 정상회의	동맹 수립 75주년 기념. 워싱턴 DC에서 개최
7월 15일~18일	미국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위스콘신주 밀워키 개최 예정
7월 16일~17일	G7	G7 무역장관 회의	
7월 26일~8월 11일	유로지역	하계올림픽(프랑스)	100년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
7월 28일	남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선 도전
7월 31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BOJ 경제전망 제시
7월 30일~31일	미국	연준 FOMC	한국시간 8월 1일 새벽 기준금리 결정
7월 (일자 미정)	중국	7월 3중 전회	공급 구조조정, 산업 개혁 로드맵 출시될 것으로 전망
8월 1일	미국/중국	대중국 고관세 조치 효력 발생일	전기차,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제품, 태양광 제품 등에 적용
8월 19일~22일	미국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최 예정
8월 22일~24일	미국	잭슨홀미팅	
8월 (일자 미정)	중국	베이다이하 회의	
9월 10일	미국	美 대선 후보 ABC TV 토론회	ABC 방송
9월 12일	유로지역	ECB 정례회의	
9월 17일~18일	미국	연준 FOMC	한국시간 9월 19일 새벽. 연준 경제전망, 점도표 제시
9월 20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9월 22일~23일	글로벌	유엔 미래정상회의	
9월 25일~27일	글로벌	IMF 및 세계은행 연간 미팅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일자	지역/국가	이벤트	Review & Preview
10월 6일	브라질	상파울루 지방선거	
10월 7일	이-팔 지역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1주년	
10월 17일	유로 지역	ECB 정례회의	
10월 31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BOJ 경제전망 제시
10월 (일자 미정)	글로벌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러시아 개최, 사우디, 이란 등 새로운 회원국 참여하는 첫 회의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6일~7일	미국	연준 FOMC	한국시간 11월 8일 새벽 기준금리 결정
11월 10일~16일	글로벌	APEC 정상회의	페루 개최, 핵심의제는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
11월 18일~19일	글로벌	제19차 G20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개최
12월 1일	중동 지역	OPEC+ 장관급 회의	
12월 12일	유로 지역	ECB 정례회의	
12월 17일~18일	미국	연준 FOMC	한국시간 12월 19일 새벽, 연준 경제전망, 점도표 제시
12월 17일	미국	대통령 선출 (선거인단 투표)	
12월 19일	일본	일본은행(BOJ) 정례회의	
12월 (일자 미정)	중국	12월 정치국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1월 28일~1월 29일	미국	연준 FOMC	한국시간 1월 30일 새벽 기준금리 결정
2월 9일	남미	에과도르 총선	부통령, 대통령 포함 총선 1차 투표 예정
4월 13일~10월 13일	일본	2025년 오사카 세계 박람회	6개월간 160개국 참여
5월 18일	폴란드	대통령 선거	
5월 (일자 미정)	호주	호주 연방 선거	

참고: 현지 시각 기준, 음영은 대선 관련 이벤트

자료: 주요 언론, 삼성증권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분석 2020년 12월**

이슈1. 지정학분석이 필요한 이유  
 이슈2. 지정학위험과 영향  
 이슈3. 2021년 3대 지정학위험



**지정학분석 2021년 1월**

이슈 1. 북한 8차 당대회 결과와 시사점  
 이슈 2. 글로벌 10대 지정학위험  
 이슈 3. GPR로 본 관찰국가



**지정학분석 2021년 2월**

이슈 1. 美 NSC 핵심들의 對중국 시각  
 이슈 2. 바이든 안선의 포석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3월**

이슈 1. 미국의 對중국 「기술유출 통제 기구와 법안」  
 이슈 2.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금융시장 법안」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4월**

이슈 1. 미국의 「차이나 디카플링」 전략 시작  
 이슈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5월**

1. 디지털 화폐의 출현과 통화패권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추진 현황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6월**

이슈 1. 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상  
 이슈 2. 중국의 일대일로와 도전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7월**

이슈 1.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발표  
 이슈 2. 유럽 그린딜의 이해  
 이슈 3. EU의 탄소배출 감축메커니즘



**지정학분석 2021년 8월**

이슈 1. Geopolitical Alpha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9월**

이슈 1. 사-독트린(Xi-Doctrine)의 시대  
 이슈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슈 3. 시진핑 27회와 투자 시사점  
 이슈 4. 중국 자본시장의 기타 쟁점



**지정학분석 2021년 10월**

이슈 1. 북한 경제상황 점검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연말호**

이슈 1. 2022년 7대 지정학 위험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분석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위기 긴급 점검



**지정학분석 2022년 2월**  
 한반도 위기, 데자뷰 2017?



**지정학분석 2022년 3월**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인가?



**지정학분석 2022년 4월**  
 이슈 1. 미-이란 핵 협상, 인플레이션의 게임체인저가 될까?  
 이슈 2. 주요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2년 5월**  
 이슈 1. 지정학 시대의 본격화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2년 6월**  
 이슈 1. 2022년 미국 중간선거 Preview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반도체)**  
 이슈 1. 지정학 시대의 도래  
 이슈 2. 반도체 거점화의 시대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배터리-자동차)**  
 이슈 1. 지정학 시대, 갈등 전개의 다층적 틀  
 이슈 2.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배터리, 완성차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방산, 바이오, 사이버)**  
 이슈 1. 안보투자 전성시대  
 이슈 2.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방산, 바이오, 사이버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이슈 1. 미-중 패권경쟁  
 이슈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3. 이란과 중동 불안  
 이슈 4.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지정학 분석 2023년 2월**  
 이슈 1. 2023년 러-우 전쟁 전망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3월**  
 이슈 1. 중국의 미국관  
 이슈 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 분석 2023년 4월**

이슈1. OPEC+ 전격 감산 발표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5월**

이슈1. Great Decoupling 시대  
 이슈2. Great Decoupling 시대의 투자  
 이슈3. Great Decoupling 시대의 승자와 그림자



**지정학 분석 2023년 6월**

이슈1. BRICS 공동통화의 도전  
 이슈2. 통화와 패권



**지정학 분석 2023년 8월**

이슈1. 중국의 경제 게릴라戰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9월**

이슈1. BRICS의 확장화 시사점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10월**

이슈1. 지정학노선과 무역재편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지정학 분석 2023년 11월**

이슈1. 2024년 지정학 전망  
 이슈2. 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



**지정학 분석 2024년 1월**

이슈1. 2024년 미국 선거 개요  
 이슈2. 바이든 승리 가능성과 트럼프 2.0 미러보기  
 이슈3. 금융시장 시사점



**지정학 분석 2024년 3월**

이슈1. 바이든 vs 트럼프 rematch  
 이슈2. 미국 금융시장 시사점  
 이슈3. 2024 미국 선거 개요



**지정학 분석 2024년 4월**

이슈1. 자본주의 4.0과 투자의 미래  
 이슈2. 지정학 관련 데이터



Samsung Securities

## 삼성증권

###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DA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역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